

---

# 기록관리 실무자로서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

---

남경호 연구사(국가보훈처)

## 1. 개인의 고민을 토론문에 담는 이유

발표문을 읽고 나서 갑자기 내 자신의 기록관리 경험을 토론문에 담고 싶어졌다. 이번 정책포럼의 발표문 모두가 기록공동체 혹은 국가기록원 등을 타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기록관리의 미래를 전망했다고 한다면, 토론문 중 하나는 현장실무자 본인의 경험과 시각으로 국가기록관리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입장에서 기록관리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앞으로의 기록관리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얘기할 것이다.

일개 현장 실무자의 경험을 여과 없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록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 활성화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욕구배설의 외침으로 치부하는 냉소적 반응도 존재한다. 마땅히 익명게시판에 올려야 하는 글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자유롭고 솔직하게(서로 존중하면서) 국가기록관리의 미래에 대해 기록공동체가 논의하길 원하기 때문이므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다.

## 2.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의 선택지

1999년부터 올해까지 20년의 기록관리의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를 국가기록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1999년 이전에도 기록관리의 역사는 분명 존재하지만,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을 기점으로 기록관리가 공공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한 듯하다. 그 20년의 역사 속에서 나는 18년 정도를 함께 했었다. 2001년도에 김선영 기록보존소장의 대학 순회강연을 통해 처음 기록관리를 알았고, 2002년도에는 대학원에서 기록학을 공부하였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록관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기록학 이론 공부와 논문쓰기에 바빠서 공공영역의 처참한 기록관리 현실을 모르고 지냈다. 2004년 세계일보의 기록이 없는 나라 기사도 대학원을 졸업한 2005년도에 처음 접하였다. 2005년도에 기록관리 혁신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가 엉망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고, 제대로 기록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은 채 현재의 직장에 기록연구사의 직위로 배치가 되었다.

초창기 기록관리 현장에서의 근무는 실로 전쟁터에 홀로 나오된 병사의 상황과 같았다. 다행히 내가 배치된 기관은 기록관리혁신팀(5급 팀장, 6급 행정직, 7급 사서, 그리고 나를 포함한 4명)을 만들어서 나름 기록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 부처 전문요원들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sup>1)</sup> 그래도 최소 1년간은 야근과 주말출근을 당연시하며 문서고 기록물 정리, 기록물 평가폐기, 기록물 분류체계 정비 등 기록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조직 내에서 나의 위치, 직장 동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였다. 처음에는 기록연구사라는 생소한 직책에 신기해하고 호감 섞인 호기심을 보여줬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점점 나의 존재는 조직 내에서 지워졌다. 기록관리법과 지침을 무기로 처리과를 들쭉시키고 다니는 기록연구사는 피곤한 존재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갔으며, 매일 문서고에 틀어박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엉뚱한 직원이 되었다. 조직 내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퇴근만 하면 타 부처 기록연구사들과 모여서 신세한탄과 위로의 술잔을 기울였다. 그때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기록관리를 무시하는 공무원 조직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항상 싸우는 마음으로 근무했다. 적어도 참여정부가 끝나던 2006년까지는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록관리보다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화합에 노력하였다. 내성적이고 대인관계가 서툰 나였지만 조직 내 동호회, 술자리에 적극 참석하였고, 기록관리 업무보다는 부서 내의 중요 업무를 더 신경쓰기 시작했다. 공무원화가 된 것이다. 아마 2009년도부터 그랬던 거 같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속담을 현실에서 절실히 느꼈던 해였고, 살기 위해서 변해야 했다. 그 이후부터는 기록 관련 사건이 터졌을 때는 나와 관련이 없으면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

1) 기록관리혁신팀은 참여정부가 끝나자마자 팀원들이 하나둘씩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고, 기록관리 혁신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으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팀은 사라지고 나는 서무팀 소속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기 시작한 거 같다. 그리고 예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던 부처 기록연구사 모임은 없어졌다. 결국 나는 학회 혹은 기록관리 관련 모임에서 참여할 때는 현실의 부당함을 쏟아내지만, 출근하면 성실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공무원(일개 주무관)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이건 온전히 나의 문제로 생각했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기관에 배치된 기록연구사들은 적어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괴로워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세종으로 이전한 부처 기록연구사들과 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고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사라졌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에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 기록관리 현장에서 제법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 3. 왜 나는 지난 20년의 성과를 뒤엎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록관리 제도, 시스템, 인력은 20년간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 나도 15년간 현장에서 근무하며 나름 국가기록관리 성과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나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것이다. 다만 그 성과의 한계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인다. 앞의 토론문에서 언급했듯 지금의 성과는 1999년의 설계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 성과의 이면에는 1인 기록관의 문제점, 정보공개와 기록이용의 혼란,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공공기록의 정치적 악용 사례 등 1999년도에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결 불가능한 문제도 존재한다. 20년간 노력해서도 해결 못한 문제라면 그 근본부터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는 15년간 현장에서 근무했으며, 정년까지는 앞으로 20년 정도가 남아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떠안고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일상반복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은퇴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미래라면 차라리 행정직으로 전직해서 승진 혜택을 받는 공무원의 삶을 살아가는 나을 것이다. 다수의 기록공동체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다면 좀 더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가기록원이 현재 진행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활동에 관심이 가는 것도 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어떤 기록관리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지난 20년간은 기록학을 중심으로 국가기록관리 체계를 설계하였다면, 앞으로는 여타의 학문, 그리고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록학 이론과 그에 기반을 둔 실무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기록의 평가나 분류는 지금까지 기록관리 영역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이론과 실무이지만, 앞으로의 20년은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기록전문직의 역할이 변화하지 않으면 기술 발달로 10년 내에 사라지는 직업군(사서와 마찬가지로)에 포함될 수도 있다. 명예퇴직이 아니라 강제퇴직이 기다리는 미래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 국가기록관리 미래의 설계가 자칫 지난 20년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내가 이론 성과, 사회적 위상, 가치관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나의 제안이 기록공동체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년의 기록관리 성과 중에서 기록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이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기록관리 영역의 외연적 성장은 인정하겠지만, 내적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기록의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휘청거리는 기록공동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기록공동체의 정체성은 구성원 개개인이 「어떤 변화에도 기록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록을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에서 발휘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정의이지만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 기록공동체의 위기와 국가기록관리의 방향성 검토

---

남경호 연구사(국가보훈처)

### 1. 기록공동체는 과연 위기인가?

발표문에서는 기록공동체의 범위가 기록관리를 목적으로 학습하고 있고, 학습을 마친 후 기록관련 분야로 진출했거나 준비하고 있고, 기록관리와 관련한 학계나 산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도 못한 채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구성원간의 다름으로 공동체 의식도, 개별적 전문성의 성장도, 제도의 안정화도, 환경변화의 신속한 대응도 모두 놓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름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근본적인 것은 공동체 구성원 다다수가 현재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록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현장의 기록실무자들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기록관리 현실에 좌절하고, 학계와 산업계는 전혀 발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상대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이기주의와 책임전가 분위기, 각자도생의 분위기도 느껴진다. 때문에 발표자의 기록공동체 위기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독초 밑에 해독초가 있듯 위기 속에서 발전의 가능성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자가 1999년부터 국가기록관리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 업무를 맡으면서 다양한 고민을 한 것처럼, 토론자도 2005년부터 현장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하면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의 기록관리 순기능과 역기능을 지속적으로 느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본인 뿐만 아니라 많은 현장 실무자들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관리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목소리가 본인 혹은 다른 유형의 기록관리 현장과는 맞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모습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충돌과

무시, 권위를 앞세운 억압, 뒤에서 욱하면서 과별을 만드는 등 모두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개인의 의견이 정답인지 아닌지 검증하고 비판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벗어나 그런 해결방안이 나오게 된 기록관리 경험을 분석하고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경험을 현장, 학계, 산업계가 공유하여 새로운 정책, 이론, 실무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수많은 경험을 일일이 분석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할까? 발표자가 언급한 것처럼 기록관리 공동체라는 기준으로 개개의 경험을 분석한다면 공동의 지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팀(조직)의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구성원은 다양할수록 좋으며, 반드시 현장 경험을 갖춘 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2. 국가기록관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1999년 법 제정, 2007년도의 전면 개정으로 인한 국가기록관리 제도의 완비, 2005년을 기점으로 대량의 기록전문직의 현장 배치로 인한 국가기록관리 제도 운영의 동력 확보, 국가기록원의 조직 확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개발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 20여년 동안 변화의 흐름은 들쭉날쭉 하였으나, 그 흐름의 중심에는 1999년도 법 제정 당시의 고민과 해결방안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는 제도상으로는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전제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체제를 구현해가고 있으며, 시스템적으로는 종이기록 기반의 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로 작동하고 있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예나 지금이나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 정착을 위해 싸우는 투사의 덕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기가 마치 성공사례처럼 여기저기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 흐름이 향후 5년, 10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은 여전히 존재하며, 종이기록 기반의 업무프로세스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전문요원의 기관 내 생존기는 앞으로도 처절하고 힘든 내용을 담을 것이다. 다만, 1999년 당시의 시각으로 미래의 국가기록관리를 설계하는 실수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과거가 현재로 이어지며, 현재는 미래를 투영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관행과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미래를 바라볼 이유는 없다. 2017년도에 다시 시작한 국가기록관리 혁신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알 것이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가기록관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장의 경험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999년 법 제정과 2007년도의 전면개정 당시 소수의 인력이 모여서 기록관리 제도를 정비하였다면, 이번에는 상향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록관리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지만, 항간에는 형식적·상투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최근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현장 의견 수렴 결과 자료를 보면 전체 기관의 30%도 안되는 응답률을 근거로 제도의 운영여부를 결정하는 듯하다. 적어도 50%는 넘길 수 있어야 기록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기록관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응답률을 높이는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기록공동체의 느슨한 관계는 단단해질 것이며, 이는 기록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의 지향점을 공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분명 어려운 작업이지만 한계를 미리 설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